

2021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모의고사 해설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인문사회계열	문항번호	■ 1번 ■ 2번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예상 소요 시간	120분		

2. 출제 의도

이 문항은 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시문의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수험생은 논제를 파악하고 여러 통계 자료와 글 자료 중 필요한 자료를 선택한 후 다른 입장도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험생에게 익숙한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제공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논제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과 같은 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룬 '대의 민주주의에서의 책임성과 대표성'이다. 자료는 대의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다수대표제(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전국구 대선거구제) 중 어떤 선거제도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토론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통계 자료와 글 자료로 구성되었다. 통계 자료는 가상의 A, B, C, D 네 국가에 대한 정보와 각 국의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 자료다. 그리고 책임성을 강조하는 다수대표제, 대표성을 강조하는 비례대표제의 긍정적 측면을 추론할 수 있는 글 자료를 균형 있게 제시함으로써 수험생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반론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3. 문항 해설

이 문항은 데이터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된 글의 핵심을 파악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논제는 대의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다수대표제가 바람직하다'와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는 두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분석 및 논거를 위한 제시문으로 각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으로 표현된 통계 자료[제시문 (사)]와 비례대표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소수 언어의 보존과 중요성[제시문 (가)], 집단 지성의 장점[제시문 (나)], 다수결 결정의 위험성[제시문 (마)] 지문이 제시되었고, 다수대표제를 옹호하기 위한 허쉬만의 이탈과 향의의 조건[제시문 (다)], 다수결 결정의 효과[제시문 (라)],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제시문 (바)] 지문이 제시되었다. 이 문항은 공통의 자료를 바탕으로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질문은 각국의 대표성과 책임성 관련 통계 자료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고, 두 번째 질문은 제시문의 핵심 요지에 대한 파악과 그것에 근거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서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제시문에 활용된 주요 관련 개념과 지식은 『정치와 법』,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을 취하였다. 본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비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을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시문 (가)는 먼저 언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언어가 지시하는 자연 사물과 그것을 나름의 방식으로 분류하고 이해하려는 인간 인식의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언어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라져가는 소수 언어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다양성의 손실이 궁극적으로는 삶의 풍부한 경험을 축소시키고 인간의 세계인식을 협소하게 만듦으로써 중요한 사회문화의 상실을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소수언어의 공존을 통한 문화 다양성의 보존이 정치제도 가운데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여론이 대변될 수 있는 정치제도라는 점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집단 간의 공존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제시문 (나)는 윌리엄 모터 힐러와 제임스 서로위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개별적으로는 전문가 집단에 비해 미미할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는 높은 해결능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전문가의 능력이 특수 분야에 한정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창의적 해결에 있어서는 집단지성이 더욱 효과적이다. 본 논술에서 이 제시문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즉 비례대표제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상품의 질적 하락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을 허쉬만의 이탈, 항의, 충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책임을 묻기 위한 항의 혹은 이탈의 조건으로 대안 선택이 가능한 자유경쟁 체제와 책임을 묻기 위한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치운영 실패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탈 혹은 항의의 소재와 대상이 비례대표제보다 명확한 다수대표제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민주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최종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많이 채택되는 다수결 결정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크는 다수결 결정을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현대 정치학자들은 다수결 결정의 정당성을 '1인 1표의 원칙'에 입각한 정치적 평등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통한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에서 찾는다. 본 제시문은 다수결 원칙에 기반을 둔 다수대표제를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터키의 대통령제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사례로 국가에서 중요한 사안이 간단히 다수결의 방식으로 결정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수결의 결정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종종 문제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기보다는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요인이나 단기적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또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극히 적은 표 차이로 결정됨으로써 선택받지 못한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기도 한다. 본 제시문은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비례대표제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바)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된 주주 행동주의가 기업경영에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우려한다.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는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며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반면, 소액주주들은 단기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무리한 전략을 요구하거나 회사경영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 전략에는 무관심한 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지문은 다수대표제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국정에 대한 높은 지배력을 토대로 장기적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간의 충돌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효율을 막아낼 수 있다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사)는 주어진 자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논제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측면에서 조사한 통계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 비교하여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통계자료를 실제 사회현상과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대표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정당 득표율 대 의석률(<자료 2>)과 시민과 정당의 이념성향 분포(<자료 3>), 그리고 책임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선거결과(<자료 4>)와 정부 평가에 따른 여당 투표확률(<자료 5>)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거제도의 효과가 각국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료 1>을 제시하였다.

4. 채점 기준

[문항 1] 채점기준

평가항목	내용(안)		배점
주장에 맞는 국가 선택	■ 자신이 취한 입장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국가의 선택 ▷ 주장 1 (다수대표제): C국 ▷ 주장 2 (비례대표제): B국		10점
	■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국가 선택 정당화		
	주장 1 (다수대표제): C국	주장 2 (비례대표제): B국	
	- 책임성을 대표성보다 먼저 고려. - 책임성 측면: A, C국이 B, D국보다 우수. - 대표성 측면: C국이 B, D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A국보다 우수.	- 대표성을 책임성보다 먼저 고려. - 대표성 측면: B, D국이 A, C국보다 우수. - 책임성 측면: B국이 A, C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D국보다 우수.	
<자료 2> ~ <자료 5> 분석 결과	주장 1 (다수대표제): C국 선택을 위한 자료 분석	주장 2 (비례대표제): B국 선택을 위한 자료 분석	40점
	▷ 책임성의 측면: - <자료 4>: 1인당 국민소득과 노동자의 소득 구조 등 경제성장에 따라 여당의 선거결과가 좌우된 A, C국이, 그렇지 않은 B, D국에 비해 책임성이 높게 나타남. - <자료 5>: 개인적 수준에서 정부 평가에 따라 여당에 투표할 확률, 즉 그래프의 기울기가 A, C국에서 B, D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대표성 측면: - <자료 2>: 비례대표제를 택한 B, D국은 정당별 의석점유율이 득표율과 동일해서, 군소정당이 의회 진입에 실패한 A, C국에 비해 대표성이 높게 나타남. - <자료 3>: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입한 B, D국의 대표성이, 두 거대정당만이 의회에 진입한 A, C국보다 높음. 특히 시민의 이념성향이 보다 다양하게 분포한 B국에서 이러한 대표성이 극대화됨.	
	▷ 대표성의 측면: - <자료 2>: 군소정당이 의회 진입에 실패한 A, C국이, 정당이 득표한 비율대로 의석을 얻은 B, D국보다 대표성이 낮게 나타남. 하지만 이러한 왜곡은 C국보다 A국에서 심하게 나타남. - <자료 3>: 여러 정당이 다양한 이념성향을 대변하는 B, D국의 대표성이, 중도성향의 두 정당만 존재하는 A, C국보다 좋음. 그렇지만 시민의 이념성향이 중도에 모여있는 C국이, 다양하게 퍼져있는 A국에 비해 대표성의 왜곡이 덜 함.	▷ 책임성 측면 - <자료 4>: B국의 여당은 개선된 국민소득과 노동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비록 득표율은 감소하였지만 재집권에 성공하여 A, C국과 비슷한 수준의 책임성을 보임. 하지만 D국은 악화된 경제상황에도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책임성을 보임. - <자료 5>: 개인 수준에서 정부평가에 따라 여당에 투표하는 정도가 B국이 A, C국만큼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D국에 비해서는 강하게 나타남.	
점수			50점

[문항 2] 채점기준

평가항목	내용(안)		배점
제시문 (가)~(바)를 활용한 선택의 정당화	■ 제시문 (가)~(바) 해석에 기반한 주장 선택의 논리		15점
	주장 1 : 선택의 정당화(다수대표제) - (다)의 논거: 책임 소재와 주체가 명료함. - (라)의 논거: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음. - (바)의 논거: 장기적 정책 추진,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	주장 2 : 선택의 정당화(비례대표제) - (가)의 논거: 정치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견해가 포섭. - (나)의 논거: 집단 지성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 방안 모색할 수 있음. - (마)의 논거: 감정에 휘둘린 다수의 견해에, 근소한 차이로 진 소수의 견해는 묵살되는 다수결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음.	
제시문 (가)~(바)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한 반론	■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		15점
	주장 1에 대한 반론의 논리 - (가)의 논거: 정치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견해가 포섭. - (나)의 논거: 집단 지성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마)의 논거: 감정에 휘둘린 다수의 견해에, 근소한 차이로 진 소수의 견해는 묵살되는 다수결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음.	주장 2에 대한 반론의 논리 - (다)의 논거: 책임 소재와 주체가 명료함. - (라)의 논거: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음. - (바)의 논거: 장기적 정책 추진,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	
재반박	■ 선택한 국가의 특징을 고려한 재반박		10점
	C국 특징 고려한 재반박 - 사회구성원의 다양성: C국은 사회구성이 비교적 동질적이어서 다수대표제로 인한 대표성의 약화가 심하지 않음. -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아 선거의 경험이 부족한 C국에서는 다수대표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동질적인 C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다수대표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B국 특징 고려한 재반박 - 사회구성원의 다양성: B국은 사회구성이 복잡한 국가로, 다양한 정당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잘 대변하는 비례대표제가 적합함. -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어 선거 경험이 풍부한 B국은 비례대표제로 인한 책임성의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음. - 따라서 민주주의 역사가 길고 사회구성이 다양한 B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글의 논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에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거를 심도 있게 서술함 ▪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10점
점수			50점

감점 요소

[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

※ 1번 문항과 2번 문항 각각 (-)15점 이상 감점할 수 없음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조정

1번	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340자 - 439자	10점 감점(-)
	440자 - 539자	5점 감점(-)
	540자 - 660자	감점 없음
	660자 초과	5점 감점(-)
2번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500자 - 699자	10점 감점(-)
	700자 - 899자	5점 감점(-)
	900자 - 1,100자	감점 없음
	1,100자 초과	5점 감점(-)

(-)10점까지

5. 예시 답안

'주장 1'을 선택한 경우

■ [문항 1] 예시답안 (공백 포함 600자±60자)

다수대표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 1을 선택한다. 이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국가는 C국이다. 책임성의 측면에서는 A, C국이 B, D국보다 우수하고, 대표성의 측면에서는 C국이 B, D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A국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먼저 책임성의 측면에서 제시문 <사>의 <자료 4>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과 노동자의 소득구조 등 거시경제 성과에 따라 여당의 선거결과가 좌우된 A, C국이, 그렇지 않은 B, D국에 비해 책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5>에서도 개인적 수준에서 정부 평가에 따라 여당에 투표할 확률, 즉 그래프의 기울기가 A, C국이 B, D국에 비해 높다. 대표성에 있어서는 <자료 2>의 상황을 볼 때, 군소정당이 의회진입에 실패한 A, C국이 각 당이 득표한 비율대로 의석을 확보한 B, D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대표성의 왜곡은 A국에서 보다 심하였다. <자료 3>에서도 여러 정당이 다양한 시민의 이념성향을 대변하는 B, D국의 대표성이, 중도성향의 두 정당만 존재하는 A, C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의 이념성향이 중도에 몰려있는 C국의 대표성이, 다양하게 퍼져있는 A국보다는 낮다고 할 수 있다.

(원고지 기준 604자)

■ [문항 2] 예시답안 (공백 포함 1,000자±50자)

다수대표제가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수대표제의 불가피성 및 효율성과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초래할 문제점 때문이다. 우선 다수대표제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정치적 평등과 상호 동의에 기반을 둔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방법이다.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균등하게 존중 받으면서 최대 다수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은 다수결 방식보다 나은 것이 없다. 또 다수결의 결정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대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 둘째, 다수대표제는 책임의 소재와 주체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정책의 입안과 수행을 유도할 수 있다.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면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참여가 높아져 책임 있는 정치를 촉진시킬 수 있다. 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분산될 경우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소액주주의 경우와 같이 참여 주체들이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단기적이고 개인적인 이익 실현에 중점을 둬으로써 통일된 의견의 수렴이 어렵고 무책임한 결정이 초래될 수 있다.

물론 다수대표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다수대표제에 대한 비판은 주로 소수의 권리가 무시되어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당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종 극히 적은 표차로 중대한 사안이 결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능한 많은 사람의 참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이, 그리고 사회의 발전에서 다양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수대표제가 반드시 대표성을 약화시키거나 집단적 지성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C국과 같이 사회적 구성이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에서는 소수자와 다수자 간의 입장차이가 심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 중 상당부분은 다수의 의견에서 포괄되기도 한다. 특히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C국의 경우에 비례대표제는 장점의 효과는 적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단점이 더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동질적인 사회에서는 다수대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원고지 기준 1,048자)

'주장 2'를 선택한 경우

■ [문항 1] 예시답안 (공백 포함 600자±60자)

비례대표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 2를 선택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국가는 B국이다. <자료 2>에서 비례대표제를 택한 B, D국은 정당별 의석점유율이 득표율에 비례하여 나타났지만, A, C국은 군소정당이 의회진입에 실패하였다. <자료 3>은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입한 B, D국에서, 두 거대정당만이 의회에 진입한 A, C국보다 넓은 범위의 이념성향이 대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의 이념성향이 보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B국에서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있다. 또한 B국은 책임성의 측면에서도 다수대표제에 못지않은 선거 결과를 보였다. <자료 4>를 보면 B국은 여당이 집권하는 동안 국민소득과 임금노동자의 소득구조가 개선되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여당은, 비록 직전 선거보다 득표율은 떨어졌지만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반면 D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노동자의 소득구조가 악화되었음에도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는 등 선거가 책임성의 도구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자료 5>에 따르면 개인 수준에서 정부평가에 따라 여당에 투표하는 정도가 B국이 A, C국만큼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D국에 비해서는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할 때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국가는 B국이라 할 수 있다.

(원고지 기준 638자)

■ [문항 2] 예시답안 (공백 포함 1,000자±50자)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처럼 정치적으로 다양한 삶의 경험이 대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소수 언어들이 사라짐으로써 그 언어들이 표현하던 자연세계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소멸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들이 대변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세계인식 역시 협소해질 수 있다. 또 비례대표제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처럼 일부 엘리트들이 지식을 독점하기 어려운 만큼 다중의 집단지성이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도 효율적이다. 나아가 다수대표제의 경우 브렉시트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근소한 표차로 결정됨으로써 다수결 투표에서 반대 유권자들의 비례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위험도 있다.

물론 비례대표제에 대해 다수대표제보다 정확한 정치적 책임 소재와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다수결로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구현하려는 공동체의 약속이자 사회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처럼 다수대표제는 책임성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중심의 기업경영에서처럼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 장기적인 정책추진 등으로 비례대표제보다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가 다수대표제에 비해 반드시 책임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B국의 경우처럼 사회 구성원이 언어, 인종, 문화적으로 다양한 경우 이들의 대표성을 보다 균등하게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책임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B국처럼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경우 서로 다른 집단들이 합의와 조정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에도 익숙하기에 비례대표제라도 다수대표제만큼 신속한 정책입안과 결정에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고, 다양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다문화사회인 경우 비례대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원고지 기준 997자)